

‘키코·DLF’서 체면깎인 윤석현… “처음부터 무리수”

〈금융감독원장〉

〈금융계〉

키코 분쟁조정안 6곳 중 5곳 ‘거부’
우리·하나銀, DLF 관련 ‘소송제기’
금융권 “당국제재 맞서는 것 이례적
금감원이 반발 실마리 제공한 것”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해 6개 은행 중 5곳이 거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이후 결정을 다섯 차례나 미뤘지만 결국 ‘불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감원의 징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기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처음부터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과 DLF 관련 중징계가 무리였다고 보고 있다. 키코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된 사안이어서 은행들이 배상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인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DLF 관련 제재의 경우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중징계를 내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에 대해 불안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미디어, 재영솔루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산업·씨티은행에 이어 신한·하나·대구은행도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

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계약일로부터 10년인 법적 시효도 다 지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키코 배상액 이상으로 채권을 감면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도 의문이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DLF 징계에는 경영진과 기관까지 금감원과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나섰다.

하나·우리은행은 당국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특히 윤석현 금감원장의 전격로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모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에 금융사가 맞서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금감원이 반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분위기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경영진 책임을 물었지만 금융사들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초여름’ 손선풍기·부채 바람 맞으며

서울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는 등 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와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제유가, 올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어려워

한은, 연초 18년만에 최저수준 하락

향후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저유가 지속가능성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초 대비 79% 수준까지 하락하며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4월 중 국제유가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가 주요 작용한 가운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요 산유국의 증산, 비상업적 거래와 같은 금융요인도 가세했다.

5월 이후 국제유가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점차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산유국 간 이해상충, 재고 누적 등으로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산유국 경제위기 가능성 ▲산유국 해외투자자금 회수 ▲미 세일산업 부실 ▲글로벌 물가하방압력 증대 등을 통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충격의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hj89@

금융위, 삼성·현대 등 6개 그룹 감독 강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예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재무건전 위해 자본적정성 점검·평가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법안 도입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한층 촘촘한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해 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주주 금융그룹인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사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부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 달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금융당국·금융회사에서 축적된 경험, 국제 적합성 등을 통해 법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을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으로 지정한다. ▲여수신·보험·금융업 중 2개 이상 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등록을 한 금융회사 1개 이상인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다만 미 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이거나 국책은행, 부실금융기관으로 감독실익이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금융그룹은 자본이 중복 이용되지 않도록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될 수 있게 자본적정성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전이위험·집중위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은 등급을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평가하고, 필요자본에 가산한다.

금융그룹은 또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를 2~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밖에도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기구를 마련해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與野갈등 끝에… 21대 국회 ‘반쪽개원’

통합당 의원들 첫 회의서 퇴장

여야 간 갈등 속에서 21대 국회가 5일 개원(開院)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야당 반발에도 관철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강행한 데 반발해 21대 국회 첫 회의에 입장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21대 국회 첫 회의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과 일부 무

소속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반쪽에 그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다.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의석이 177석이니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도 어긋나는 상황이 된다”며 “국민의 42%는 저희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석 비율대로 삼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제1야당 참여 없이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 것은 7대 국회 이후 53년만의 일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